

## 전라도 1000년 ... 천년을 품고 새천년을 날자



무진주(광주의 옛 지명)에서 영산강을 따라가면 만나는 나주읍성의 동문인 동점문(東漸門). 성벽 안에서 올라다 본 누각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2018년은 앞으로의 천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 전라도의 전성시대를 여는 초석을 닦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려 현종 1018년 정도 ... 전국팔도 중 가장 오랜 역사 광주·전남·전북 상생으로 과거의 '전성시대' 되찾아야



“본래 백제의 땅으로, <중략> 성종 14년(995)에 전주·영주(溟州)·순주(淳州)·마주(馬州) 등의 주현으로 강남도(江南道)를, 나주(羅州)·광주(光州)·정주(靜州)·승주(昇州)·패주(貝州)·담주(潭州)·낭주(朗州) 등의 주현으로 해양도(海陽道)를 삼았다. 현종 9년(1018)에 합쳐서 전라도로 하였다. 관할하는 목(牧)이 2개,

부(府)가 2개, 군(郡)이 18개, 현(縣)이 82개이다.”

1449년(세종 31)에 편찬하기 시작한 1451년(문종 1)에 완성된 ‘고려사’에 등장한 전라도에 대한 설명이다.

전국팔도인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가운데 전라도는 1018년에 탄생, 가장 오랜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후 경상도(1314년), 충청도(1356년), 강원도(1395년), 평안도(1413년), 경기도(1414년), 황해도(1417년), 함경도(1509년) 등의 순이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전라도 앞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에 남아 있는 과제들은 여전히 버겁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역시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상대적인 박탈감은 여전하다. 여러 가지 통계에서 전라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소지역주의에 힘이 실리면서 예전과 같은 전라도의 끈끈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전라도는 1896년 8월 4일에 이르러 칙령 제36호로 ‘13도제’가 도입되면서 노령산맥을 기준으로 북도와 남도로 양분됐다. 근대적인 행정구역이 처음 설정된 것이다. 인위적인 구역 나눔은 1906년 전남 소관 이었던 흥덕·고창·무장 등 3개 군이 전북, 전북 소관인 구례군이 전남으로 각각 바뀌면서 완성됐다.

전라도가 2개로 나뉜 뒤 최근 들어 그 울타리는 높아지고, 연대의 구심력은 상실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 지역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주, 전남, 전북 역시

서로 다른 길을 달렸다. 광주시장·전남지사·전북지사가 모여 전라도를 고민하는 장이었던 호남권정책협의회가 지난 2008년 중단되기까지 했다.

호남권정책협의회가 재개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이다. 윤창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현 국무총리), 송하진 전북지사가 6년 만에 손을 맞잡으면서 정도 천년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주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안이 겹칠 수밖에 없는 전라도의 여건을 감안하면, 협의회의 논의 주제 다양화,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전라도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18년은 함께 함으로써 더 웅대한 미래를 여는 해가 되어야 한다. 과거 전라도의 전성시대를 되찾기 위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과 물자가 붐비는 전라도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함께 밖으로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넘보는 ‘강한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여론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광주일보는 2018년 창사 66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의 발전을 기원하고, 지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 위

해 기념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글로 옮길 때 쓰는 ‘큰따옴표’ 모양을 닮은 이 로고에는 지역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호남의 민심을 더욱 크게 반영하겠다는 광주일보 임직원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 지방선거의 해 ... 광주·전남 지역일꾼 422명 선출

2018년 지방선거의 해가 밝았다. 오는 6월 13일, 광주·전남에서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0명, 기초의원 311명 등 모두 422명(2014년 6·4 지방선거 기준)의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사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광주형 일자리, 스마트 시티 조성, 에너지 밸리 확대, 4차 산업혁명 거점 구축, 군 공학 이전, 문화산업 육성, 서남해안 시대 핵심 사업 개발 등 광주·전남의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보다 면밀하게 후보를 검증하고 막판까지 신중한 선택에 나서으로써 여당과 야당 차원의 치열한 공약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 간의 공동 상생 공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호남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비전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정치적 비전과 역량을 함께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당, 통합 가속 ... 반대파 거센 반발

국민의당 전(全)당원투표 결과, 예상했던 대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 입장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다. 통합을 주도해온 안철수 대표는 재신임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최종 투표율이 23.0%에 머물면서 통합반대파가 주장한 투표율 3분의1을 넘지 못해 효력 및 정당성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 전당대회 개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74.6%가 통합 및 재신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 및 재신임 반대는 25.4%였다.

나흘간 실시된 이번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26만437명 가운데 5만9911명이 참

여, 최종 투표율은 23.00%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안 대표 측은 1월 통합 절차를 밟아 2월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일정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는 이번 투표율이 전체 당원 3분의1에 해당하는 33.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분당 가능성을 포함한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새해특집 32면 발행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 3·4면

전라도 정도 1000년 11~14면

I♥DREAM 아이가 꿈이다 15면

무술년 개 이야기·운세 17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24·25면



##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는 첫날 아침

함께 행복을 키우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SAMSUNG